

원유수급불균형 이대로 좋은가



안희경
농수축산신문 기자

낙농산업은 제도의 산물이라고 부른다.

우유의 특성상 세계적으로도 낙농산업은 수급균형을 최대 목표로 쿼터제를 통해 생산을 관리하고 있다. 때문에 쿼터를 관리하는 주체와 농가 사이의 끝없는 갈등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원유가 모자랄 때는 원유전쟁을, 원유가 남을 때는 수급전쟁을 감행해야 하는 낙농업계의 현실상 원유수급균형을 위한 각 업계의 노력은 항상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지난해 FMD로 잠잠했던 원유수급문제에 다시금 불이 붙고 있다. 예고된 생산과잉으로 수급균형이 깨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원유수급불균형 이대로 관철을까.

원유생산량 가파르게 증가, 수급불균형 예고돼

최근 마리당 산유량 증가로 원유생산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진흥회 일납유량을 살펴보면 1월 1,339톤을 시작으로 매달 50톤 이상씩 늘어 이번달 중순이후 1,430톤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지역의 생산량은 이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서울우유는 일납유량 1,900톤을 상회하며 FMD 이전인 2010년 수준을 거의 따라잡고 있는 형편이다.

이같은 원유생산량 증가는 마리당 산유량 급증과 생산군의 도태지연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원유값 인상 이후 경영에 비교적 여유가 생긴데다 배합사료값이 지난해보다 3% 가량 내리면서 농가들이 양질의 사료를 급여, 마리당 산유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산우 마리당 산유량은 지난해 11~12월 대비 1~2kg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MD 이후 원유증산정책과 업체들의 앞다툼 생산경쟁으로 농가들의

생산의지가 올라가면서 생산군의 도태를 평년보다 지연시키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유업체의 관계자 B씨는 “2.9산이 평균 도태산차였는데 요즘은 짜는 만큼 돈이 된다는 생각에 도태를 지연하면서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소들도 짚을 짜고 있다”며 “마리당 산유량도 1kg 이상 늘어난 상황으로 전국 착유마릿수 20만마리가 모두 1kg만 늘었다고 해도 양은 엄청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후 원유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데 있다. 농가의 생산의지가 최고조에 이른 데다 올해말 일부 유업체의 쿼터 재배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FMD로 원유생산이 급감하면서 쿼터를 해제한 일부유업체에서 올해말 쿼터를 재배정한다고 하면서 농가들의 생산의지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보통 평균 납유량으로 쿼터를 재배정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최대한 생산을 해 쿼터를 높게 받으려는 농가들이 많은 만큼 생산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귀띔했다.

원유생산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정체돼 있다는 점에서 향후 원유수급불균형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원유수급 대책 마련과 함께 근본적인 낙농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쿼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원유수급 균형 대책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쿼터 문제다. 지난 3월초 열린 낙농선진화대책 협의회에서 정부는 낙농선진화대책의 추진방향을 단기간 수급균형을 도모하는데 집중키로 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낙농선진화대책은 수급균형을 최대 목표로 이전까지 논의됐던 전국쿼터제나 집유일원화 등의 제도적 논의보다는 단기간에 실현이 가능한 현실적인 정책 수립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측 한 관계자는 “전국단위쿼터제나 집유일원화 등은 논의 기간만 해도 몇 해가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원유생산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은 당장 내년에 닥칠 문제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쿼터의 관리주체는 그대로

두고 장기적으로 200만톤 가량의 생산유지를 목표로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해 현행 단계에서 큰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급안정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단계별로 수급관리체계를 변경해 결과적으로는 중앙낙농기구에서 농가관리와 업체 내 농가 간 생산량 조정, 업체별 수급목표량 조정 등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현장 낙농가 일각에서는 정부가 손 안대고 코 푸는 식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일부 지역 낙농가들은 현재 국내 낙농가의 쿼터가 225만톤에 육박하는 만큼 정부가 설정한 적정쿼터인 200만톤 외 25만톤은 정부가 농가로부터 구입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수급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한 낙농가는 “농가가 요구했던 전국쿼터제와 정부가 제시한 전국쿼터제의 방식이 상이하다”며, “현재 정부가 말하는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 쿼터인수도시 발생하는 귀속물량 등의 발생으로 자연스럽게 쿼터가 소멸돼 적정쿼터가 맞춰지는 방식으로 이는 농가가 구입한 사유재산인 쿼터를 무시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쿼터에 관해서는 각계가 다른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쿼터에 대해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생산자 단체는 적극적인 생산대책을 위해서는 쿼터를 정부가 유상으로 구입해 소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업체는 완전히 상반된 입장이다. 원유수급 불균형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유가공협회를 중심으로 한 유업체는 사료가 인상, 고령화, 후계자 부재 등 사육환경 악화로 향후 원유생산 과잉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원유수급 불균형과 관련된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수급안정대책을 내놔야 한다는데는 업계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개방화 파고에서 낙농산업이 가장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낙농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내년도에는 수급불균형까지 예고되고 있어 낙농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그러나 주요쟁점 사안들에 대해 생산자는 물론 유업체, 정부가 모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어 표류상태에 있는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으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생산자를 비롯한
관련업계 종사자
모두의 합의점을
최대한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강
력한 의지가 필요”